
OECD고용노동사회위원회 참석

2018. 4.

□ **출장목적**

- 제132차 OECD고용노동사회위원회 참석 및 의제대응

□ **과제명**

- [수탁18-018] 2018 OECD 보건복지 이슈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 **출장기간**

- 2018.03.20.(화)~2018.03.24.(토) (3박 5일)

□ **출장지역**

- 프랑스(파리)

□ **출장자**

- 강신욱 선임연구위원, 강희정 연구위원

□ **일정요약**

출장일	국가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논의사항, 습득사항
2018.03.20. (화요일)	프랑스	OECD 본부	김지은 사무관, 장재원 과장, 안선미 주무관 외	• ELSAC 안건 대응 논의
2018.03.21. (수요일)	프랑스	OECD 본부	“	• 제132차 고용노동사회위원회 참석(1일차)
2018.03.22. (목요일)	프랑스	OECD 본부	“	• 제132차 고용노동사회위원회 참석(2일차)
2018.03.23.~24. (금~토요일)	프랑스 한국			프랑스 파리 출발 한국 인천 도착

- I. 회의명 : 제132차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정례회의
- II. 개최일시 및 장소 : 2018.3.21~3.22. OECD 본부 회의장
- III. 주관기관 : OECD 사무국
- IV. 참석자 : 회원국가, 파트너 국가, 자문기구(EU) 등, 한국은 고용노동부 김지은 사무관, 보건복지부 장재원 과장, 김진옥 사무관, 안선미 주무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선임연구위원, 강희정 연구위원, OECD 정책 센터 김덕곤 부분부장, 오정숙 연구원, 당 대표부 윤수경 참사관 참석

(1일차)

Item 6. 사회정책장관회의(Social Policy Ministerial)

<사무국 보고>

- 사회정책 포럼 및 사회정책장관회의 이슈, 일정(안) 보고
 - 19개 국가 “Risks that Matter” 서베이(survey) 참여
 - 26개 국가 장관회의 참석(14개 회원, 3개 파트너, 9개 비회원) 확인
 - 장관회의 분과세션 참여 의사 현황(M1:5개 국가, M2:3개 국가, M3:없음)
 - 정책포럼과 장관회의에서 각국의 장관 참여 의사 확인 요청
 - 정책 포럼 참석과 포럼의 분과세션에 대한 선호
 - 장관회의 전체 회의 참여(a speaking role)와 3개 분과 세션 선호
 - 분과세션의 좌장은 부의장국 포르투갈, 그리스, 스웨덴 대표가 수행
 - 5월 14-15일 행사일정(안), 부대행사, 준비 및 향후 일정 안내(안건 참조).
 - 4월 4일까지 포럼과 장관회의 참여와 분과 선호 의사 확인, 4월 6일까지 이 슈브리프와 선언문에 대한 의견 제출
 - 정보공유: <http://oe.cd/one-elsac> 사무국: SocialMinisterial2018@oecd.org

2018 사회정책 포럼 일정(2018년 5월 14일 캐나다 몬트리올) - 공동의 번영을 위한 사회정책: 포용적 미래-	
9:00-9:30	개회사
9:30-11:00	개회 전체 회의: 내일의 사회정책 발전을 위한 오늘의 경청
11:00-11:15	휴식
오전 분과 세션 - 모두를 위한 사회적 보호 보장-	
11:15-12:30	F1:사회 보호에서 집단책임 vs.개인책임 F2:사회 보호에서 격차 좁히기
점심 (부대행사) OECD-Nordic 이사회 보고서 발표, 북유럽 국가의 성공적 정책 소개	
오후 분과 세션	
14:15-16:00	F3:앱(App):사회 정책의 새로운 도구 F4:파트너십을 통한 영향: 21세기 사회 혁신
16:00-17:00	폐회 전체 회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정책
17:00-18:30	네트워킹 리셉션(캐나다 가족아동·사회개발부 장관 주제)
19:00-21:00	장관 만찬

2018년 사회정책장관 회의 세부일정 (2018년 5월 15일 캐나다 몬트리올) - 공동의 번영을 위한 사회정책: 포용적 미래-	
9:00-9:30	개회사
9:30-12:15	오전 전체 회의
10:30-10:45	휴식
12:15-12:30	단체 사진 촬영
12:30-14:30	장관 오찬
오후 전체 회의 - 협력 강화 : 다양성과 사회적 포용을 촉진하는 정책 -	
15:45-16:00	휴식
분과 세션: 불평등한 고령화 예방	
16:00-17:15	M1:현명하게 나이 들기 - 인구고령화 과제 해결 M2: 악순환이 타파 - 아동, 청년, 세대간 불리 M3: 변화의 시간 - 사회 정책에서 성 주류화
17:15-17:30	분과 세션별 좌장의 요약 보고
17:30-18:00	클로징 전체 회의: 사회정책장관회의 폐회 및 장관회의 선언문 발표

<주요 논의 및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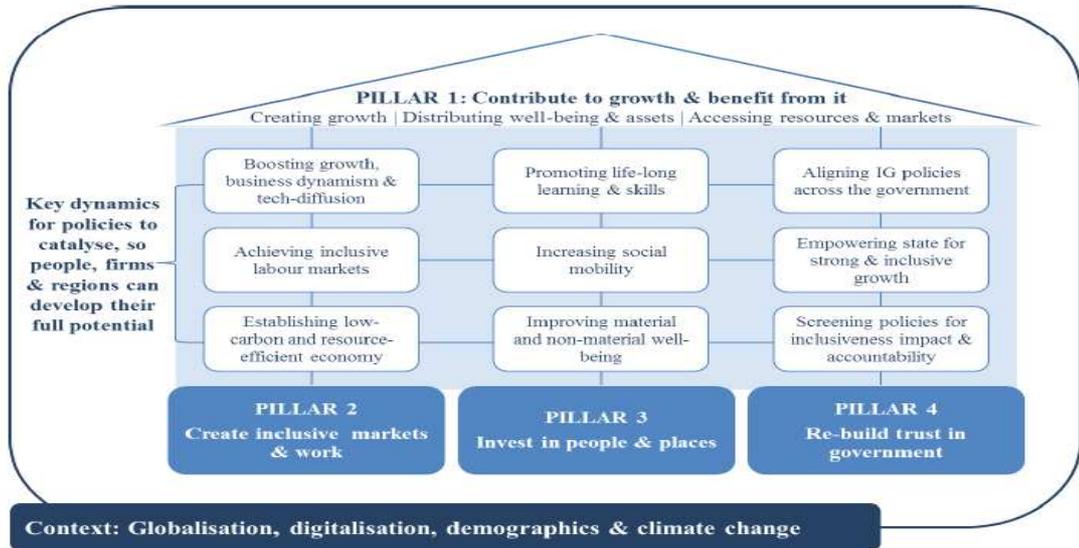
- (러시아) 비회원국에 대한 참석 기회 제공에 감사하며, 러시아의 참석에 대해 질의함. 사무국은 러시아는 현재까지 초청 되지 않은 국가임을 확인함.
- (일본) 국회 개회 기간이라 장관의 참석이 어려우며, 고위급의 대리 참석 가능성을 밝힘. 장관 회의 오후 분과 세션에서 M1(ageing wisely)의 참여 의사를 밝힘. 아울러, 사회정책포럼에서 사회적 혁신을 위한 파트너십 확대 등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내용과 의도에 대한 추가 정보 제공을 요청함.
- (스웨덴) 부의장으로써 젠더 영향 분과에 대한 참여를 요청
- (라트비아) 장관이 참석하며, 활동적 고령화(active ageing) 정책에 대한 경험 공유를 위해 M1 세션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힘.

- (리투아니아) 아동과 젠더 이슈에 관심을 표명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관심은 모든 나라의 관심사항이며, 세션 간 참여의 균형 필요함.
- (폴란드) 참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고령화 이슈에 대한 관심 표명
- (그리스) 노동부 장관이 참석 예정, 정책 포럼과 장관 회의의 두 행사의 연관성과 중요성에 대한 정보 필요
- (사무국) 대표단의 참석 규모는 1+2명, 정책 포럼은 최대 12명까지 가능하며, 현재, 정책포럼 오후 분과 세션(사회 혁신)에는 멕시코, 에스토니아, 영국이 참여 예정임.

Item 7. 포용적 성장 (Inclusive Growth)

<사무국 보고>

- 2017년 OECD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 MCM)의 후속조치로서 2018년 MCM에서 포용적 성장에 관한 통합 보고서 발표 예정
- 보고서의 주요 내용 보고
 - 소득 상위 1%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생산성과 포용성의 관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성장으로 인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취약 계층에 대한 기회의 형평성 제고 필요성 제기
 - 고용·기술·혁신·디지털 전략 등을 포괄하는 OECD 전략을 기초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제시
 - 2017 각료이사회에서 포용적 성장에 대해 좀 더 통합된 수준의 전 정부적 정책 대응책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OECD로 하여금 각 위원회들과 관련 조직들이 함께 포용적 성장에 관한 정책적 대응의 프레임워크 개발, 2018년 이사회에서 발표하도록 결정한 바 있음.
 - 정책 프레임워크는 회원국들이 같은 방향에서 성과 향상을 위한 통합적 정책 패키지를 설계하도록 가이드 제공
 - 4개의 기둥(Pillar)으로 구성(Pillar 1: 모두가 성장에 기여하고 편익을 얻는 것(가장 중요한 결과), Pillar 2: 시장의 포용성 강화와 노동의 미래를 위한 준비, Pillar 3: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 보장, Pillar 4: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신뢰 재구축)



- 포용적 성장 지표

- 성장의 포용적 성과(outcomes), 포용적이고 효율적인 시장, 기회의 평등 및 미래 번영의 기반, 포용적 성장의 거버넌스의 4개 영역별 6개 지표 제시

<주요 논의 및 결과>

- (러시아) 현재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틀이지만 통계적 데이터의 부족이 과제임. 출발점에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미래 활동을 위해 경제부서와 협력이 매우 중요함.
- (일본) 자동화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영향에 대한 원인 설명 요청
- (영국) 정책 프레임워크에서 모두가 편익을 얻는 측면 강조
- (미국) 노동시장에서 교육시스템에 대한 관심 필요, 스킬 미스매치(skill mismatch)를 감소시키는 정책의 중요성 강조
- (EU) EU의 스코어보드 활용의 사례 제시, 사회보호시스템의 강조를 위해 세제 혜택 등 소득 재분배 관련 지표 강화 제안
- (스웨덴) 몬트리올 고위급 정책 회담 안내, 부모에 대한 투자 필요
- (스위스) 대중은 스코어보드에 관심이 높음. 그러나 포용적 성장 관점에서 모든 것을 통합하는 지표 수집이 필요함.
- (호주) 정책 프레임워크는 유용한 정책 개발 도구이고 포함된 지표가 유용한 것으로 검토됨. 다만, non-standard work, part-time work 용어 사용에 대한 정리 필요

- (이태리) 고령화 진행 상황에서 보편적 의료보장성에 대한 지표 포함을 제안함. 대시보드는 다른 문제들을 포함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사무국) EU의 scoreboard와 차별적으로 dashboard의 활용성을 강조하고 포용적 성장의 틀을 확장하고자 하는 개념을 강조함. 아울러, 포럼과 장관회의 세부 사항에 대한 현황을 보고함.
 -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핵심은 포용적 성장임. 인구의 40%가 생활수준 향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음. 역동적 관계에서 좋은 질의 교육 등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계층이 발생하므로 사회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함. 제안된 정책 프레임워크는 각국의 상황에서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우선순위 결정에 기여할 것임.
 - 소득 하위 40%의 국민이 성장의 혜택을 보도록 정책 추진, 대시보드와 프레임워크가 모든 국가로 하여금 포용적 성장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구로 역할을 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임.
 - 주요한 도전과제는 발전을 지속시키는 것임. 생산성 향상이 분배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초기부터 통합적인 틀을 만드는 작업의 의미를 강조하고 접근에서 기회의 형평성을 강조함.

(2일차)

Item 13. 소득 재분배: 정책 드라이버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DRIVERS)

<사무국 보고>

- Economics Department on Policy Drivers of Income Redistribution과의 공동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이며, 최근의 소득 분배 측면에서 트렌드를 형성해나가는 정책적 변화들의 역할을 실험한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함.
 - 느린 생산성 증가와 증가하는 불평등은 특히 임금 불평등에서, 조세와 트랜스퍼(transfers)를 통한 정부의 재정적 재분배 기능 위협
- 보고서는 2018년 3월 22-23일 Working Party of the Economic Policy Committee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수정 보완을 통해 워킹 페이퍼로 출간 예정
- 재분배에서 변화의 정책 드라이버를 확인하기 위한 두 개의 보완적 접근
 - Empirical regression analysis(ECO), Microsimulation analysis(ELS)

- Tax & Transfer 시스템 규모의 변화가 소득 재분배 감소에 기여
 - 1)근로연령층 인구에 대한 현금 지원에 대한 사회지출 감소 2) 대외개방정도의 증가로 개인 소득세의 불평등 완화 효과 감소
- 재분배 감소 효과의 정책적 원인은 1)비취업자 대상 급여의 감소, 2)연금수급 은퇴연령의 상향 조정, 3)최상위층 대상 개인소득세 감소
- 한편, 재분배 효과를 증대시킨 요인으로 1)취업층 대상 급여의 증가, 2)저소득층 대상 조세의 누진성 강화
- 두 개 정책 모의실험 도구를 이용하여 근로연령층 가구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화되는 원인으로 ‘설계’ 효과와 ‘환경’ 효과를 분해하여 제시
- 유로모드(EUROMOD)에서는 정책 변화(설계)보다 기존 정책 하에서 시장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환경 효과가 크게 작용
- 장기적 관점(2001-2010)에서 개혁효과를 평가하는 OECD 조세-급여 모형에서는 2001년 이후 취업 가구 내에서 상이한 소득수준 가구 사이의 재분배는 강화되었으나(누진적 소득세와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급여 효과 작용), 취업가구와 미취업 가구 사이의 재분배는 약화됨(미취업자 급여수준이 2001년이후 감소).
- 조세와 급여의 개혁이 근로연령대 개인과 그 가구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시장소득 변화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 고려 제시

<주요 논의 및 결과>

- (TUAC) 전반적 재분배 효과의 감소가 일을 하도록 지원해서 얻은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것임을 지적함. 미국 사례를 들어 모든 영역에 대해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이 근로 유인을 감소시켜 문제를 유지시키는 원인일 가능성을 지적함.
- (스웨덴) 재분배 정책이 매우 중요함에 동의하고 보편적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재분배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을 밝힘. 하지만, 현물급여의 효과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가 현금과 조세(tax)만의 효과를 분석하는 모델에서는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스페인) 현물 급여의 효과를 포함하는 접근의 필요성을 제안함.
- (스위스) 보험제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실제 이로 인한 영향을 받은 인구 규모가 분석에 반영되었는지 의문임.

- (노르웨이) 불평등의 확대 요인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정책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 또한 분석 모형에서 현물급여의 반영이 필요함.
- (사무국) 기술적 부문과 연구 동기로 질문을 구분하여 답변함.
 - 주로 조세와 급여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기타 정책들의 간접적 효과를 분석에 모두 반영하지 못했음. 특히, 현물 급여의 효과를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매우 복잡한 분석 모델이 요구되기 때문임. 현물급여 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2011년 “divided we stand” 를 참조하기 바람.
 - Tax & Benefit 모델에서는 인구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유로모드를 이용한 모델에서는 실제 급여 수급정보를 활용하였고 인구 가중치를 반영하였음.
 - 현재 보고서는 매우 기술적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계속 진행 중인 과제임을 강조하고 정책 권고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음에 동의함.

Item 14. 중간층: 중간층의 소득 추이(MIDDLE CLASS: TRENDS IN MIDDLE CLASS INCOMES)

<사무국 보고>

- 출간 예정인 중간층 실태에 대한 보고서의 첫 번째 장의 내용 보고
 - 중간층에 대한 정의와 소득 추이, 중간층의 위기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 기타 장은 중간층의 소득 감소, 고용상태, 생활비 증가, 강화 정책으로 구성
- 보고서의 주요 내용
 - 중간층은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75%-200%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핵심 역할을 수행하므로 이들에 대한 소홀은 정치, 사회적 불안정 초래
 - OECD 국가에서 중간층 비율의 평균은 61%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산층에 속함(저소득 빈곤층 12%, 저소득 비 빈곤층 18%, 고소득층 9%).
 - 대부분의 사람들(2/3)이 중간층에 속한다고 인식
 - 2007/8년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중간층 인식 비율은 급격히 감소 추세(한국과 일본은 2007년 이전부터 감소), 감소 패턴은 연령대와 국가별로 다름.
 - OECD국가들에서 중간층이 감소하는 것과 달리 전 지구적으로는 중간층 증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 노동시장 양극화와 노동의 미래는 일부 중간층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중간층에서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 중간층 강화 정책 필요
 - 노동력의 숙련 향상: 아동보육, 조기 아동 교육, 유급 육아휴직 등 제공으로 생활수준과 고용 촉진
 - 고등교육 접근도 향상과 비용 부담 완화: 중산층 확충과 지식경제 수요 부합
 - 법정 최저임금 인상: 불평등 감소와 중간층 보호의 새로운 접근으로 주목
 - 노동조합의 역할 강화, 주거비 과부담 감소, 복지급여 자산조사 요건 완화, 중간층의 은퇴대비 저축 유인 제고 등 생활안전성 향상 정책 필요

<주요 논의 및 결과>

- (TUAC) 중간층의 고령화 증가 현상에 주목해야 함. 노인인구 중심으로 설계된 70년대 사회보호제도는 청년층을 포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교섭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대안 검토가 필요함.
- (BIAC) 기술 개발이 중요한 영역이며, 기업과의 대화 및 근로자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이상의 생애주기적 지원이 필요함.
- (네덜란드) 4 그룹 국가들에 대해 분석했으나 그룹들 간 관련성 문제가 있음.
- (칠레) 분명한 근거가 필요하고 왜 중간층을 주제로 논의하는지 의문임.
- (스위스) 사회적 이동성과 중간층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통합할지 의문임. 기술측면에서 양극화 용어는 적절하지 않으며, 기술 향상으로 대체가 바람직함.
- (리투아니아) 중간층은 정치적 문제이기도 함. 사회이동성이 중간층을 강화의 기회를 제공할 것임. Tax & Benefit 제도 뿐 아니라 기술개발, 교육 등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는 의미를 강조해야 함.
- (러시아) 중간층 규모의 측정에서 OECD 기준과 개별 국가 상황의 기준에 차이가 있음.
- (사무국) 소득 양극화 주제와 차별성을 중심으로 과제의 목적을 강조함.
- 신흥경제국에서 중간층이 증가하더라도 적절한 사회적 보호가 없으면, 이들은 빈곤화 위험에 취약할 수 밖에 없음. 중간층에서 연령구조 변화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 유럽국가에서는 청년층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에서는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음.
- 이 과제는 누가 중간층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로 고려될 정책들에 대한 제안을 요청함.